

성착취 수단 악용 '랜덤 채팅 앱' 오늘부터 '19금' 된다

'실명인증·대화저장·신고' 3대 보호기능 없으면 적용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 87%가 '19금' 규제 대상 포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 이용하도록 했다"

청소년 성매매·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1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신고 절차와 같은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 점검에서 87%의 랜덤채팅 앱이 이런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실명·휴대전화로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3가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앱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여가부가 지난달 30일 기준 랜덤채팅 앱 534개를 조사한 결과 87.8%인 469개가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번 규제를 통해 대부분의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이용 불가 매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유해표시(이른바 '19금')를 앱스토어·마

켓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고 앱을 설치해도 청소년이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국장)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 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채팅 중 피해가 발생하면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의 누군가와 무작위(random·랜덤)로 연결돼 대화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다. 서로가 특정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화는 공개된 게시판에서 이뤄지지 않고 1대1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구분	국내	국외	합계
청소년 이용가	61 (15.0%)	4 (3.2%)	65 (12.2%)
청소년유해매체물	347 (85.0%)	122 (96.8%)	469 (87.8%)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 여가부가 지난달 30일 기준 랜덤채팅 앱 534개를 조사한 결과, 87.8%인 469개가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이런 특성 때문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건만남'이나 성착취 범죄 장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진행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랜덤채팅 앱 399개 이용자 76.4%가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했다. 연구진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밝혔음에도 21.4%가 조건만남을 시도했다.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조주빈(25)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 A(15)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혐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앞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개 랜덤채팅 앱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렸다.

고시가 시행되는 11일부터는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국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제를 어길 경우 2차례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계속 어기면 형사 고발한다.

해외 사업자가 유통하는 앱의 경우 앱스토어나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미희기자



'정치 검찰 규탄한다'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가 9일 광주 동구 광주시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 부정 금전거래 의혹 경찰관 수사...피의자로 입건

광주 모 경찰서 A경위, 전남 근무 당시 비위 의혹

광주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임지인 전남에서 부정금전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사건

관계인과 금전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검은 A경위가 과거 전남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관계인과 금전이 오고간 비위 정황을 파

악,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경위의 현 근무지인 경찰서에 지난 4일 A경위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A경위의 비위 내용·적용 혐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분양권 다운·편법 증여' 광주 부동산 교란 무더기 적발

다운거래 의심 104건·편법 증여 의심 417건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짙은 외지인 부동산 교란 행위가 행정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지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6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실거래 신고 전체자료 3만5576건을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가운데 분양권 다운거래 104건, 편법 증여 417건 등 모두 521건의 세금탈루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세 미만자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지역별로는 전남 189건, 서울 61, 경산권 50건, 경기 47건, 충청권 30건, 전북 23건, 인천 9건, 강원 5건, 제주 3건 등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례만도 6건에 달하고,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 증여는 11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가 중개업소 8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7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치구와 손잡고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과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 소득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성 거래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